

## APT 규제자 고위포럼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APT 규제자 고위포럼이 APT와 세계은행(World Bank) 공동 주최하에 개최되어 31개 회원, 국내 통신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부처의 고위급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이번 회의는 규제관련 이슈만을 주제로 아·태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APT측의 초청에 따라 참석한 김동선 정보통신부차관을 포함, 정부대표 5명, 민간업체 및 연구소 3명 등 8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회의 내용 요약 및 김동선 차관의 기조 연설을 정리, 신는다.

<편집자 주>

금번 회의는 6세션을 통해 WTO기본통신협상, 전기통신분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및 각국간 규제제도와 함께 상호접속, 허가 등 통신분야 주요이슈, 그리고 제3세대 이동통신관련 규제문제, 인터넷 규제 등을 논의하였고, 세계전기통신의 날 프로그램 등에 논의하고 폐막됐다.

김동선 정보통신부 차관은 회의 참석 중 APT 이종순 사무총장과 별도 회담을 갖고 한국과 APT 간 전기통신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양측은 아·태 지역의 정보사회구현을 위한 APT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역내 IT선진국인 우리측 기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같이 했다.

특히, 이종순 사무총장은 통신전문가의 파견 및 '98년 이후 매년 20만불 규모의 특별기여금을 통해 APT 발전과 아·태지역의 정보화격차에 기여해온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시했다.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전기통신분야 전문기구인 APT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 우리나라의 APT에서의 활동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APT개도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초청·연수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훈련과정도 회원국들의 변화하는 정보화 수요에 맞춰 공무원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전파관리 등 정책과정으로 개편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김차관은 APT 규제자 고위포럼 참석 후 최근 북미 등 주요수출지역의 IT수요위축에 대비, 수출지역 다변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내 주요 IT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IT협력단」을 이

끌고 지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모로코를 방문했다.

다음은 APT 규제자 고위포럼에서 김동선 차관이 “디지털 시대의 아·태지역 통신규제 정책”에 대해 발표한 연설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한국의 정보통신 규제정책 추진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되며 그 1 단계는 ‘80년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설립을 통해 전국적 통신망 구축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88년 1가구 1전화시대의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었다.

‘90년대에는 통신시장내 본격적 경쟁의 도입으로 규제정책은 2단계로 접어들었으며, ‘98년 WTO기본통신합의에 따라 모든 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현재 원칙적으로 주파수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업자 수의 제한을 받는 무선통신사업 외에는 모든 분야의 진입제한이 철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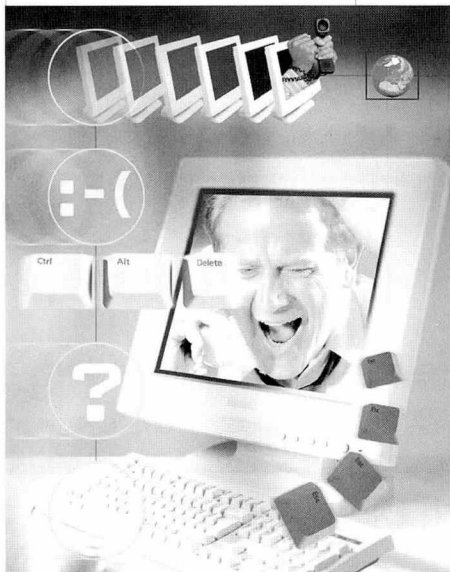
또한, 한국은 시장자유화와 더불어 통신서비스 시장의 유효한 경쟁의 확보가 정보통신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공정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한 규제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발전시켜 왔다.

우선 1990년대 초반부터 요금제도, 상호접속 등 통신시장의 경쟁에 필수적인 제도적 틀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부터 이동전화접속료에 대해 원가주의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시장에서의 사업자간 혁신적 경영과 한국인들의 정보이용에 대한 뜨거운 열의로 한국의 정보통신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선전화는 전인구의 49%인 2,200만명이, 이동전화는 전인구의 60%인 2,800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전인구의 50%가 사용하고 있고 특히 1Mbps급 초고속 인터넷도 전가구의 28%인 400만 가구가 사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한국은 유·무선서비스에 대한 번호이동성제도(number portability)의 시행, 가입자망 개방제도(LLU)의 도





입, 무선인터넷의 상호접속 의무화 등 공정경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92년 설립한 전문 규제심사기관인 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인력 확대를 통해 그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통신사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최소화하여 보다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기간사업자인 한국 통신의 민영화를 2002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정부가 지난 20여년간 통신규제정책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며 비차별적인 정책과 규제환경의 조성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초대규모의 M&A가 진행되는 글로벌화된 통신시장에서 일국 국경내 규제정책의 효과성은 타국과의 공조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하겠다. 특히 변화된 통신시장에서 정부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만은 해결하기 힘든 정보격차의 해소 등 시장보완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정보화 사회에 참여하여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21세기 국가 정보화 비전인 「Cyber Korea 21」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전국 144개 주요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에 인터넷접속장비와 함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2002년까지 장애인, 농·어민, 노인 및 주부 등 정보화 취약계층 1000만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목표를 세우고 작년말까지 350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정보화가 진전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정보격차 문제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정보인프라 독점으로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선·후진국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세계 경제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혜택을 모든 인류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APT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및 민간산업계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보·지식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범세계적 정보통신망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사업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의 초고속 연구망을 연결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아시아와 유럽간 교류·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 이에 대한 회원국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희망한다.

또한 개도국의 정보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IT교육확대 및 정보·과학기술이전 등 인적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통신 정책 및 규제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는 한편, 역내 통신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APT 개도회원국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역내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며, 역내 선진 회원국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역내 정보격차해소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SEAN+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 설치·운영을 제안하신 바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동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선진 회원국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